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수급액 21% 깎여”

### “순 혜택 1965년생 14%·1985년생은 38% 깎여” “젊은 층일 수록 더 줄어…1985년생 6953만원 감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 수준 깎인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총연금액은 1975년생(50세)의 경우 20.3%, 1985년생(40세) 21.8%, 1995년생(30세) 22.1%, 2000년생(25세)

은 21.3% 삭감된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삭감 규모와 차이가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05년생은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은 13.4%, 1985년생은 14.6%, 1975년생은 15.6% 감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젊은 층의 순 혜택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순혜택 수입비 비교'를 보면 2030년 수급자인 1965년생(평균 가입자 기준) 순혜택은 2억7229만원에서 2억3314만원으로 14.4%(3915만원) 깎인다. 수급비도 3.5배에서 3.2배로 낮아진다.

반면 2050년에 신규 수급하는 1985년생은 순 혜택이 1억8411만원에서 1억1458만원으로 37.8%(6953만원) 줄어든다. 수급비도 2.4배에서 1.7배로 낮아진다.

전 의원은 “정부 발표는 총연금액 삭감 규모가 20~30세는 과소, 40~50세는 과대 추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기대여명에 따른 실제 수급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실

제 수급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작동기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될 경우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순 혜택이 더 많이 삭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부가 마치 이번 개혁이 젊은 층에 유리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전 의원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부에 모수개혁 전후 연금 총액 삭감 규모, 모수개혁 이후 자동삭감장치 적용 전후의 연금 총액 삭감 규모, 자동삭감장치 적용 후 노인빈곤율 전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뉴스

## 산업부 R&D 예산 지원, 호남 7.6% 불과 김원이 “여전히 홀대”…수도권·경상권 등 3개 권역 90% 차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서 호남지역에 대한 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기관(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지원은 총 21조9560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조8185억, 2021년 4조4043억원, 2022년 4조8137억원, 2023년 5조1477억원, 2024년 8월 기준 3조7716억 원이 지원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4.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4.0%,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22.5%인데 비해 호남권(광주·전북·전남)은 7.6%, 기타(강원·제주 등)는 1.8%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별 예산지원액도 경기 1조179억원

(27%), 서울 5871억원(15.6%), 대전 3284억원(8.7%) 순이었다.

호남권의 경우 전북이 10위(1272억원, 3.4%), 전남 13위(849억원, 2.3%), 광주 14위(671억원, 1.8%)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산업부는 R&D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업 대상으로 혁신역량, 수월성 등을 고려해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과 산업기술인력 등이 존재해야 했다. 호남지역의 산업발전은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진행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호남은 국가 R&D 사업 등 산업 정책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 거점 특화단지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 “군공항 남의 집 불구경” 비판 광주시당 “노력 다할 것”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양부남 시장위원장 선출 직후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군공항 이전 논의를 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연석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국회의원 연석회의는 광주와 전남의 입장, 향후 해결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광주시·전남도 간담회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당은 지난달 6일 광주 시청에서, 지난달 19일 전남도청에서 각각 민간·군공항 이전 간담회를 2차례 진행했고, 지난달 23일에는 민주당과 광주시의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중앙당 차원의 TF 구성을 요청했다”며 “전남도청 간담회에는 당사자인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당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처럼 광주지역 8명 국회의원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참여업체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위원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의원들과 동행명령장 집행관이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21GRAM으로 향하고 있다.

## 대통령실 출신 44명, 대기업 주요 보직으로…재취업 100%

대통령실·기재부 등 6곳…취업 통과율 100%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비서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현대자동차, 쿠방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2년 5월~2024년 8월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자 183명 중 179명(98%)이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9개 기관 중 6개 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기관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면 재취업할 수 있다. 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을 경우에도 재취업이 가능하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것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출신 공직자와 기업 간 유착관계의 고리를 잘라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

## 문체부 국립예술단, 서울공연 86%…광주 21회·전남 26회

서울과 광주·전남 지역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 공연 횟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8월 기준)간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개 시·도 공연자차단체 공연 4236회 중 광주 공연은 21회(0.5%)에 불과했다.

울산 7회, 충북 15회, 제주 16회에 이어 인천과 함께 4번째로 낮은 공연 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26회(0.6%)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공연 중 3656회(86.3%)는 서울에서 진행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3.5%, 지난해 84.7%, 올해는 8월 기준 89.6%로 서울 공연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

민 의원은 “문화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일부 지역이 아닌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韓-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원전 협력·동남아 진출 교두보

“북 핵개발, 러-북협력 용인불가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국과 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말라카냥 궁에서 페르디난드 로우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뜻을 모았다.

지난 1949년 수교 후 정상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설정하고 공동 문건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 발표에서 “필리핀은 75년 전, 동남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이며, 6·25 전쟁 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준 대한민국의 고마운 친구의 나라”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필리핀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인태 전략 이행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협력 대상국”이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관계는 1950년 한국전에 외국군 최초로 필리핀 병사들의 파병으로 시작된 연대에 기반하여 강화돼왔다”며 “오늘 필리핀과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계속 북돋아주는 지정학적, 경제적 환경 속에서 양국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시켜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나아가 지역·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총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르코스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셨으며,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두 정상은 여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남중국해상 규칙 기반 해양 질서의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은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 전남 보건지소 공보의 미배치율 38.7%로 ↑

### ‘의정갈등 여파’…217곳중 84곳 미배치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전남도내 공중보건(공보)의 미배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58.5%)이었다.

전남은 충북과 함께 공보의 미배치율이 가장 높았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남지역 내 공보의 미배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17곳 중 84곳에 공보의 미배치율이 38.7%로 나타났다.

미배치율은 38.7%, 공보의 미배치해야 할 보건지소 10곳 중 4곳 꼴로 결원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보건지소 공보의 미배치율 21.4%와 비교하면 증가했다. 지

역별로 따지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58.5%)이었다.

전남은 충북과 함께 공보의 미배치율이 가장 높았다.

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지역의 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다. 공보의 수도 감소했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 취약지에서 공보의 파견을 남발한 것은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 “벼멸구 피해 심각…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 문금주 의원 “쌀값·병충해 이중고 겪어”

역대급 폭염으로 전남지역에 벼멸구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주요 피해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7일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 피해가 우후죽순 번져 피해 농가 주민들은 끔찍한 쌀값에 이어 병충해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농촌진흥청로부터 제출받은 벼멸구 발생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 6월 중구발 벼멸구의 비례량이 많았고, 그 시기 또한 빨랐으며 7~8월에 벼멸구 생육에 최적의 온도조건이 형성되면서 세대 경과 일수가 평년 대비 10일 이상 단축돼 조기에 3세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9월 기준이 평년(21.7도) 대비 고온(26.6도)으로 벼멸구의 활력이 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온으로 피해가 확산됐다”며 “잠복한 농촌 현장의 고통이 털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호 기자

## 화약띠 두른 북한 오물풍선…사실상 무기

### 북한이 무기화 할 경우 치명적 위협

북한이 현재 실험하고 있는 오물 풍선은 수소 가스로 채워졌고, 그 아래 봉지에는 화약띠를 두른 것으로 파악된다. 발열 타이머 장치가 시간이 흐르면 불꽃을 일으켜 화약띠를 폭발하며 쓰레기를 뿌리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북한 오물풍선 실험 빈도가 잦아지고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떨어지는 확률도 높아지면서, 북한이 무기화할 경우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6일 국방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은 지름 3~4m 크기 고무풍선에 쓰레기, 비닐, 거름 등을 담은 비닐봉지를 매달아 오물풍선을 만들었다.

풍선과 봉지 사이에는 발열 타이머 장치가 달려있는데 건전지나 작동한다고 한다. 풍선 아래 달린 쓰레기 봉지에는 화약띠를 들렀는데, 이는 타이머 장치와 전선으로 연결돼 있다.

발열 타이머는 풍선이 부양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선을 쏘아 불꽃을 일으킨다. 다만 쓰레기 봉지에 두른 화약띠가 어떤 종류의 화약을 어떻게 처리해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